

양극화·지역·계층 갈등 넘어 '국민대통합' 이뤄야

인사권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수술

경제민주화 당선인 강력한 의지 필요

박근혜 정부의 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치열하게 전개된 대선만큼이나 많은 과제를 안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

우선 '안철수 신드롬'으로부터 촉발된 정치개혁에 대한 화답을 국민에게 줘야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양극화와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의 속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박 당선인이 구상한 정치개혁안의 근간은 바로 '권력 내려놓기'다. 그중 첫 단계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술을 단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해 총리에게 현법상 보장된 장관 제청권을 부여하고,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 인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회 개혁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는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전력자 공무집임권을 20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업별 기준도 내놓았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안에는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며 일부는 개헌이 전제돼야 하는 공약도 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직후부터 새 정부 출범 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설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집권 후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문제는 여야 지도자가 만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나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 모두 최고 권력자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문제도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박 당선인은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메스'를 가하기보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 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확대하는 선에서 재벌개혁의 수위를 조정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재벌개혁을 단행할 경우 자칫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벌개혁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둔 상황에서 재계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사회통합과 대통령=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 내내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왔다. 지역·계층·세대·이념 간 갈등을 뛰어 넘어 '100%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사회 전반의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이다.

그는 특히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 균형발전과 인사탕평"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자가 호남지역을 찾을 때마다 강조했던 '대탕평인사'와 지역균형발전이 가시화할지도 주목할 사안이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을 막론하고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에 의한 인사, 성별에 따른 차별 인사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차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당장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당제인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 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초박빙 선거전의 후유증을 조속히 치유하고 민생 공약의 실현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언급했던 대로 '국가지도자 연설회의'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열어, 민생·한반도·정치혁신·국민통합 등의 의제에 대해 약당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계는 이를 공약에 대해 투자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약한 규제들은 대부분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로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재개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을 가질 수도, 정반대로 사문화될 수도 있기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대고 논의할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끈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과거사 인식이 논란이 되자 5·16, 유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뒤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다.

특히 유신 피해자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호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캠프 내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화합·통합의 시대정신을 내세워 반대파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동교동계 인사들을 영입하며 민주화 세력과 화해를 시도하는 등 '대통합 행보'를 해 온 민족 대통합 위원회가 주후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간 단점으로 거론돼온 내부소통 및 대화 부족 등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술계 지원 '문화재정 2%' 실현되나

문화부, 당선인 공약에 큰 기대감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문화재정 비율 2% 공약 등 문화예술계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기대감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문화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문화예술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부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문화부문 공약의 첫 번째 항목으로 문화재정 2% 달성을 내세우는 등 예산 증대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으로 1.

지금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업무를 가져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는 문화예술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며 "새 정부가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류 진흥에 역점을 둔 기존 기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콘텐츠코리아 페'를 설립해 '한국 스타일'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페'를 조성하는 등 한류 산업의 토대를 강화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강장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헛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 한다.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 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www.indara.co.kr 광주은행 6층신세계회원점사거리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의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기기로 물체를 읽거나 바라보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물시 깔깔하고 눈알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알이 뿌여진다
- 다른 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흥미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열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Canon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총판) 문의전화 062)383-3000